

|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국회 토론회 |

새로운 사회적 대화, 잘해야 하고 잘할 수밖에 없다

이세종 전문위원 정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한국경총,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17일(목)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미와 해석을 다룬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논의의 장은 지난 4월 23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기념비적으로 합의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을 기초로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입법 논의를 위한 사전 토론회의 성격이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이철수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제는 박명준 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노동계에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이 참여했고, 경영계에서는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가, 정부대표로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이 참석했다. 그리고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과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전문가로는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가 자리를 빛냈다.

박명준 수석의 발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무엇을, 왜 바꾸려 하나, 어떤 효과를 기대하느냐’의 내용은 앞선 글(44쪽~69쪽)로 같음하고, 이번 지상중계에서는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과 패널들의 열띤 토론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개회사 및 축사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전부개정법률안은 여야 환노위 위원 전원이 동의를 했다.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굉장히 희귀한 일이다. 유례가 없다. 5월에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다.

입법을 사실은 자신할 수 없었다. 이번에 공동발의를 하지 않으면 올 연말이나 된다. 국회일정을 보면 걱정이 됐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많이 협조를 했다. 감사드린다.

최근 한국지엠 협상에 참여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은 지금 같은 노사관계로 가면 한국사회의 희망은 없다는 것이다. 미국지엠에서는 한국에서의 생산활동, 공장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공장은 어떤 수익성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굉장히 높은 임금 때문이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제조업 전반에 대해 궁극적으로 경기변동에 유연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노동계가 나서야 한다.

‘해고는 살인’으로 대변되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내왔다. 구조조정이 사회안전망으로 연결돼야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갈팡질팡 해왔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사정 간에 대타협이 절실하고 그 첫 단계가 이번 법안 발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대타협이 가능하다면 대기업 공공기관은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그 양보한 임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사람들의 임금을 올리는 데 사용하는 사회적 대타협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이번 법안은 5월 중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 청년, 여성 등이 참여할 뿐만 아니라 노사가 중심이 된 협의가 생산적인 결과를 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 새로운 사회



적 대화의 출범을 위해 예산이든 인력이든 최대한 지원하고 돕겠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노사정위원회였다. 결국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사회적 타협이 나와야 하는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라는 것이 연륜이 짧고 정부가 다급했다. 뭔가 해야 한다고 급했다.

노사가 서로를 알아가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타협점을 만들어가기보다 전쟁을 치르듯이 진행됐다. 사회적대화가 깊이를 가지고 사회 전반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를 하고 안이 마련된다면 국회가 받아서 법안 발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름도 바뀌게 되는데, 노사정위원회의 그간의 아쉬움은 뒤로하고, 왜 실패하고 안 됐고, 뛰쳐나갔고 끊어졌는지, 그런 실패를 또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주체들의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너무 재촉하지 말고 여유를 가져야 한다. 저희는 기다리겠다. 잘 해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감회가 새롭다. 작년 9월 26일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문을 열었다. 여러 주체들 간의 의견차를 줄여가면서 4월 23일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 여섯 주체들이 짧았지만 지난한 과정에서 고생을 많이 했다. 제안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환노위 전원이 서명한 입법발의는 처음일 것이다. 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과거의 큰 갈등이 있었던 한국 전력의 배전분할을 중단시켰던 당사자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98년 경제위기 요동 속에서 대 타협으로 노동계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 흥 원내대표가 말했듯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노동계에서 제안하기 쉽지 않다. 일부 두려움도 있고 잘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있다. 함께 격려해주고 문을 열어준다면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는 과정에서 속을 태운 사람 중 한 사람이다. 작년 9월 김주영 위원장이 제안한 이후 도입되기까지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결실로 나타나서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환노위 여야 의원 전원의 공동발의라는 진귀한 사건이 일어났다.

토론회를 통해서 법안으로 인프라가 갖춰진 이후 논의될 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넓어진 사회적 대화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노사가 뜻을 모으면 정부는 적극 협조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의원께서 원내대표에 당선된 것을 보면서 감회가 새롭다. 전태일 열사부터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의 과정을 이어 오면서, 이제는 노동이 역사를 책임지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과거 많은 엘리트들이 관심을 가졌고, 이는 우연이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노동계 출신이라는 것, 단순히 노동계가 아니라 노동현장 출신이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 노사정위원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노학연대 시절을 거치면서 노

동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다.

사회적 대화를 잘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넘어 잘해야 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도 내용은 단순하다. 고용은 유지하되 임금을 조정하는 것을 했다. 충분히 우리도 실력이 있다. 국회가 힘을 실어줘서 노동계는 어느 정도 중립을 맞춘 것 같다. 사용자들의 의지와 자세에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저기 가면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 토론회

이철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운 사회적 대화다. 이번 법안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위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로 발의됐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성립되기도 전에 국회와 정부에서 도와준다니 감회가 새롭다. 잘 될 것 같다.



박명준 수석전문위원

발제내용 : 앞선 글(44쪽~69쪽) 참조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뜻 깊고 의미 있는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산업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해 실천하는 장이 열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큰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라 직장, 학교 안 민주주의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 갑질 해소, 미투 운동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실질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오늘 법 제도도 그 뒷받침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겠다. 첫째, 법안 1조 '목적'에 나와 있는 사회통합은 선언적이긴 하지만, 각 구성원의 다양성 존중의 토대 위에서 이뤄졌으면 한다. 왜냐하면 다양성 존중은 특히 차별 금지 내지 평등 실현 원칙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둘째, 법안 3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역시 합의 사항이 아니라 협의사항이라는 점이다.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이행방안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삭제할 필요성이나 실익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노조 간의 연대, 초기업적 노조활동 보장이 중요하다. 노

조가 없는 경우 사업장 안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보완해서 미조직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사업장 내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중앙단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이뤄졌을 때 각 사업장으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전달할 체계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말할 때, 재개를 위해서 노사정 간의 신뢰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과거의 노사정위는 그동안 신뢰가 무너진,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의 들러리였다는 불신이 있다. 재작년 한국노총의 탈퇴로 기능을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프로세스도 중요하다.

1월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출범하고, 새로운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 내용은 모두 주체들이 합의한 사항들이다. 그러나 현 노사정대표자회의라는 체제가 이미 사회적 대화의 체제라고 했지만, 새로운 사회적 대화로 가기 위해 낡은 체제에서 벗어나 노사정 모두가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은 과도적 기구이다. 노사정 모두 새로운 논의를 위한 내공을 쌓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논의를 할 시간이 됐다.

그렇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축사, 개회사에서 올해 여야 합의로 환노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약속했는데 조속히 법안이 입법화 돼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 있다. 정치권에서 강력한 지지를 부탁한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다. 개편

논의에 어려움 있었듯이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면 더 많은 어려움 있을 것이다. 고비 고비마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 사이의 신뢰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를 만들어 가는 동력이 될 것이고 초반부에는 특히 중요할 것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이번 합의는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정 합의로 '새 사회적 대화기구'의 모습을 만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주요 노사정 주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논의과정 및 합의과정에 참여한 것은 노사정 대화의 온전한 복원이라는 측면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쉬운 의제부터 논의해 나가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는 밥그릇을 만드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요리를 맛있게 해서 국민들에게 내놓을 차례이다.



노사정은 대화 안착과 신뢰 형성을 위해 우선 합의를 이루기 쉬운 논의 과제를 선정해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정해졌다. 참여주체 확대는 발제문과 같이 '포괄성의 구현'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저대변 분야에서의 대표성의 난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기존 참여주체뿐만 아니라 새롭게 참여하게 될 참여주체가 진영논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탄력적 태도로 대화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대화의 주체인 노사정은 이제 이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입장인 것 같다. 노사정이 치고받고 싸울 수는 있지만 그 해결책은 대화라고 생각된다. 시대가 요구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노사정이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사회적 대화가 앞으로 노사 중심성으로 가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됐다. 많은 분들의 축사를 들으면서 정부에 대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간의 비판은 정부가 많이 노사를 압박했다는 것이며, 정부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당성 확보 기구로 노사정위원회를 활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데 대한 비판인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는 최대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할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격차, 산업경쟁력 강화의 기준과 원칙 등 현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논의자료를 드려야 할 것이다.

합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주저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는 합의와 이행에 있어서 정부는 노사의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다만, 노사정위원회가 전부는 아닌 것 같다. 중앙 단위의 사회적 대화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업종 단위의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대화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의 경우 노사관계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장이 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상충된 부분도 함께 손을 봐야 할 것 같다. 중앙단위와 지역단위가 잘 어울려질 수 있도록 법안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사회적 대화가 시작됐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범위와 설정은 더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많은 분들이 얘기 해주셨는데, 개정 취지에는 모두들 동의하는 것 같다. 사회적 대화를 통

한 양극화 해결 등은 정말 좋은 방향인 것 같다.

양극화 및 불평등체제 해소라는 과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간의 노사정위는 구성단위 자체가 양극화의 한쪽 극단에 있었다. 당연히 다수 노동자와 동떨어져 있었다. 이제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여성노동자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확대된 참여주체가 자신의 다른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현재 노동관련 단위나 위원회에 여성 노동의 대표가 없는 것을 지적해왔는데, 여성의 대표성은 말살되어 왔고 대화의 통로도 막혀 있었다.

의제로 성차별 해소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담아냈으면 한다.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촛불혁명의 민심에서 드러난 것 같이 경제와 일터의 영역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이해대변의 기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양극화 내지 이중구조화의 분열상은 자본과 결탁한 정부의 의도적인 노동통제·노동배제 정책의 결과이다. 이제는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목소리를 조직하겠다는 선언과 같이 광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삼자주의 탈피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 기능이 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참여 주체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약자들까지 주체로 호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조직되어 있지 않은 노동자의 지지와 옹호라는 측면에서는 대표성 문제보다는 테이블의 대표자가 아닌 현장의 노동자를 호명하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산별교섭과 업종별 위원회의 사회적 대화체제에 대한 구분·정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지역별 사회적 대화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지역노사민정협의체의 틀을 버려야 한다. 기초 단위에 따른 역할이 다를 것이며, 다양한 시도가 지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계층별 위원회는 노사중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대화 참여주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어떤 의제까지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확히 보이지는 않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끝으로 새로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다른 정부 기구와의 관계문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가 드러나 있지 않는데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